

성명서

2022년 서울동성애퀴어축제를 단호히 반대하며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를 거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는 2022. 7. 15.부터 7. 31.사이에 서울광장에서 제23회 동성애 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밝히며, 서울시에 광장사용 신고를 하였고, 서울시는 조만간 열린광장시민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6년부터 서울동성애퀴어축제를 강력히 반대해온 우리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반대 국민대회")는 2022년 서울동성애퀴어축제를 단호히 반대하며, 특히, 서울시에 대하여 동성애 축제를 위한 광장사용 신고에 대하여 수리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동성애퀴어축제는 개최될 때마다, 동성성행위가 성윤리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들의 찬반의 가치관이 격돌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보는 공공 광장에서 노골적으로 과도한 신체 노출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동성성행위 등 각종 음란한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연설과 부스운영과 물건판매 또는 반포, 영화상영과 노래와 춤 등 공연행위, 그리고 시위를 공공연하게 행해왔다. 동성애퀴어축제는 과반의 국민들이 신앙적, 도덕적 이유로 반대하는 동성성행위와 성전환행위에 대하여 공공연히 이를 노출하여 정당화하는 문화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부정관념을 표시하는 행위를 차별행위의 하나인 혐오표현으로 몰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그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 이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부터 음란성, 유해성 논란이 심한 동성애 퀴어축제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전 서울시민이 이 음란하고 유해한 동성애 퀴어축제의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어 왔다.

퀴어축제를 방치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수많은 국민들은 동성애를 미화하는 목소리만 듣게 되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을 처벌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게 된다. 그리고, 퀴어축제의 내용이 가지는 선정적 음란성 때문에 참여자들이 점점 대규모화되어가서 관리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러 동성애 등이 유발하는 수많은 피해뿐만 아니라 축제기간 중 수많은 성범죄 등이 발생하여도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동성애 및 성전환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해외의 사례들은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퀴어축제의 해악을 막고,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우리 사회와 국가가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2년에도 동성애퀴어축제의 개최를 단호히 반대하기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밝힌다. 또한, 박원순 시장 이후 당선된 오세훈 새 시장은 퀴어축제를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 반대국민대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1. 에이즈 등 수많은 질환의 주된 경로가 되는 동성성행위와 여성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성전환행위 등을 옹호 조장하여 국민의 분별력을 흐려서 개인의 건강, 여성의 안전 위협을 초래하는 서울동성애퀴어축제를 단호히 반대한다.
2. 선정적이며 음란성이 있는 공연, 연설, 물건반포 등으로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음란행위를 옹호 조장함으로써, 선량한 성윤리에 의하여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해롭게

하는 서울동성애퀴어축제를 단호히 반대한다.

3. 수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은 동성성행위와 성전환행위의 보건적 유해성과, 성윤리적 문란성과 건강한 가정과 사회에 초래하는 유해성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균형 있는 정보와 지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인권보도준칙이 동성애 등에 대한 진실보도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언론기관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진실 보도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시민과 국민들의 분별력을 해치는 서울동성애퀴어축제를 단호히 반대한다.
4.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이름만 듣고 찬반을 물으면 찬성이 과반을 넘으나, 그 내용인 동성성행위와 성전환행위를 신앙, 양심상 반대할 자유를 민사소송 등 법적 책임으로 막고, 육체적 남성을 여성으로 대우하도록 강요하여 여성 전용공간인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물으면 국민의 과반이 반대한다. 이처럼 겉은 선하고 무해해 보이나 속은 악하고 유해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서울동성애퀴어축제를 단호히 반대한다.
5.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유해한 동성애의 정당화, 객관적 보도를 막는 인권보도준칙, 반대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주도하며 서울동성애퀴어축제를 지지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6. 동성애축제와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일부 유럽, 북미, 남반구의 해외 국가들에게 확산되어 보건적 폐해 확산, 건강한 가정의 파괴, 여성안전권 침해, 반대하는 국민들의 신앙 양심의 자유박탈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일부 국가의 대사관들은 우리나라에 퀴어축제 및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분별 없는 서울동성애퀴어축제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7. 성적지향차별금지 문구가 도입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2001년 제정된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등 옹호활동, 동성애퀴어축제의 허용 등으로 대한민국의 공교육에서 공공연히 동성애 등을 미화 정당화하고, 객관적 진실보도가 통제된 결과, 대한민국의 분별력 약한 청소년층에서 에이즈감염자 등이 급증하고 유해한 음행 습관의 확산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미래세대의 오염을 막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서울동성애퀴어축제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8.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이 건전한 문화와 공익을 위한 광장이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집회 시위의 헌법상 자유를 행사하려 한다면 어느 곳이든 적절한 곳에 집회 신고를 하고 행하면 충분하다. 서울시민의 건전한 문화공간인 서울광장 사용을 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서울광장시민심의위원회가 그 동안 퀴어축제행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이 유해하고 위험하며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서울광장을 퀴어축제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광장의 운영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 반대국민대회는 서울시가 2022년 퀴어축제준비위의 서울광장사용신고를 심의함에 있어 우리 사회, 서울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광장사용신고 수리를 마땅히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9. 만일, 일부라도 사용 허락을 하려 한다면, 반대하는 국민들과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종전 박원순 시장 재임 때처럼 독점사용을 허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 매년 더 많은 시민, 국민들이 반대대회를 개최하는 상황이라 사용허락이 불가피하다면 마땅히 구역을 나누어 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도 서울광장을 허락해서, 시민과 국민들이 찬반 양쪽의 대회를 동시에 보고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음란성, 선정성, 보건적 유해성이 있는 퀴어축제는 광장독점 사용을 허락하고, 건강한 성윤리, 가정을 보호하려는 반대국민대회를 광장 주변을 어렵게 사용하도록 한 박원순 시장의 편파적 옹호 입장을 답습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전면 불허가 마땅하지만, 일부 허가해야 한다면 당일 더 많은 규모로 개최되는 반대국민대회에도 구역을 나누어 광장 사용을 동시에 허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 국민대회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동성애 등을 옹호하는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가 삭제되고 각종 차별금지조

례들이 폐지될 때까지, 동성애퀴어축제 개최 시도가 소멸될 때까지 이 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끝까지 결연히 싸울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년 6월 15일

2022 서울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